

근로빈곤 결정의 제도 동학: 노동시장과 가구, 복지국가 분배 과정 분석

류 기 략*

요약

본 연구에서는 한국복지패널 4-11차년도(2008-15) 자료를 활용하여 우리나라 근로빈곤의 구조와 동학을 가구-노동시장-복지국가의 분배과정 모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그간 근로빈곤 연구가 근로 및 빈곤 개념의 규정과 측정 문제를 주로 다루고 노동시장에서의 취업 및 실업 지위의 지속과 반복을 통해 빈곤 동학을 규명해 왔으나, 상대적으로 제도의 분배 효과를 분석하는 연구는 드물었다. 본 논문에서는 노동시장에서의 임금 소득 확보, 가구 단위에서의 복지 욕구 충족과 가구원 간의 소득공유, 복지국가 단계에서의 사회보장기여금과 소득세 납부 및 공적 이전소득이 근로빈곤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근로빈곤은 전반적으로 2008-11년까지 각 단계에서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그 이후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노동시장 단계에서는 전일제 노동 여부가 근로빈곤에 가장 큰 영향을 주었으며, 종사상 지위와 고용형태에 따른 근로빈곤률의 차이도 두드러졌다. 가구 단계에서는 가구 노동 강도와 소득자 수가 빈곤률과 빈곤탈출에 큰 영향을 주었는데 그 관계가 반드시 선형적이지는 않았다. 복지국가는 근로빈곤 탈출에 미치는 영향이 전반적으로 작았다. 제도의 분배과정 관점에서 근로빈곤 집단은 주로 가구-복지국가 단계, 혹은 노동시장-가구-복지국가 단계 내내 근로빈곤 위험에 처하고 있었다. 모든 단계에서 근로빈곤 위험에 노출이 된 적이 없는 비위험 집단은 약 80%를 차지하고 있었으나 그 규모에는 큰 변동이 없었다.

주요어: 근로빈곤, 제도의 분배성과, 순빈곤 탈출률, 가구 노동강도, 비위험 집단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ryukirak@krivet.re.kr)

1. 문제제기

노동시장에서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빈곤에 처해 있는 근로빈곤층에 대한 학문적, 정책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Atkinson et al., 2002; Brulle et al., 2018; Cantillon, 2011; Crettaz, 2013, 2015; Crettaz and Bonoli, 2011; Immervoll and Richardson 2011; 길현중 외, 2015; 노대명 외, 2013; 이규용 외, 2013).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고 노동시장 내에서 분절과 불평등 확대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근로빈곤층의 빈곤 지위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려는 노력도 다양하게 시도되어 왔다(Crettaz and Bonoli, 2011; Eichhorst et al., 2008). 빈곤 해소 관점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소득 지원 중심 복지정책의 효과에 대한 문제제기가 지속되면서, 그 과정에서 ‘일을 통한 빈곤탈출’이 근로빈곤층과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정책의 새로운 과제로 제시되기 시작하였다(노대명 외, 2013; Goerne, 2011).

그러나 실제 근로빈곤층의 빈곤 결정과정이나 빈곤 진입 및 탈출은 노동시장에서의 취업이나 실업 여부 못지않게 가구의 욕구나 구성의 변화, 국가의 사회보장 등 빈곤 정책의 복합적 결과라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노동시장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빈곤 대책의 우선적 과제이긴 하지만, 근로빈곤을 둘러싼 여러 제도가 빈곤의 결정과 지위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복합적으로 파악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본 연구는 최근 유럽 국가에서 주목받고 있는 노동시장-가구-복지국가 제도의 분배성과를 중심으로 근로빈곤 동학을 분석하는 접근법을 수용하여 우리나라에서의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근로빈곤 동학의 변화를 경험적으로 규명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논의

1) 근로빈곤 개념과 주요 요인

근로빈곤 개념은 개인 수준에서 근로여부, 가구 수준에서 빈곤 기준 설정 등의 개념적 논의와 빈곤 선 기준 적용 등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근로빈곤 개념에 대한 정의는 국가 및 지역별로도 상이한데, 영미권이나 유럽에서는 주로 공식통계를 통해 빈곤추이를 제시하고 그것이 학술연구에 영향을 주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European Commission, 2004, 2010; OECD, 2015).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저임금 노동자 문제나 사회지표 연구에서 근로빈곤 위험집단의 여러 차원을 분석하

였으나 학자들 간 합의는 부재한 실정이다(Thiede et al., 2015, 2016; Van Winkle and Struffolino, 2018). 빈곤 기준선 설정에 있어서도 미국은 절대빈곤선 기준으로 빈곤선을 낮게 설정하는 반면, 유럽은 중위소득 60% 등 상대빈곤 기준으로 사회통합 지표를 제시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Cantillon, 2011; Goerne, 2011; Lohmann, 2009; Marchal and Marx, 2018). 개인 단위의 근로 개념에 대해서도 연구자 간 합의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근로빈곤 지위 판정에 포함해야 할 인구 집단에 대해서도 근로의 지속성과 기간을 두고 연구자간 합의가 거의 전무한데, 미국의 경우는 근로주간과 연간근로시간 개념을 제시하면서 1인 이상 일하고 있는 가구의 모든 구성원을 포함하는 경향을 보여준다. 또한 자영업자와 저임금 노동자를 포함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이견이 크다(Thiede et al., 2015, 2016).

근로빈곤 개념 정의의 모호성은 연구 결과의 비일관성으로 이어지고, 분석 결과에 대해서도 다양한 해석을 낳고 있다. 개인 수준에서 근로 개념에 초점을 둔 연구에서는 근로빈곤이 주로 노동시장에서의 실업과 취업, 종사상 지위 등에 의존하여 정의되는 경향이 있어서 상대적으로 가구와 복지국가의 영향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요컨대, 기존 연구에서 빈곤 지속의 결정요인으로 주로 저임금 근로와 노동시간 및 노동시장 결합의 강도에 주목한 반면, 상대적으로 근로 빈곤 동학에 대한 소득 분배 관점에서 접근이 부족하였다(Horemans et al., 2016; Mosthat et al., 2009). 근로빈곤 개념이 주목 받게 된 것은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빈곤 상태에 처해 있는 근로 취약 집단이 확대되고 있다는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지만, 소득지원에서 일자리 지원을 중심으로 하는 고용중심 복지국가로의 전환이 빈곤 탈피에 충분조건이 되지 못한다는 비판도 있다(고혜진·조효진, 2018). 빈곤 계층의 노동시장 참여를 유인하는 노동시장 활성화 정책이 빈곤 감소에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연구 결과도 이러한 점을 뒷받침한다(구인회 외, 2010; 노대명 외, 2013; 박노옥 외, 2012; 안서연 외, 2011; 이상은 외, 2010). 요약하자면 근로빈곤 개념이 주목 받는 가운데,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근로능력자의 빈곤 해소에 있어 복지국가의 사회보험과 사회보장 지출이 효과적이지 못하며 경제 및 노동시장 구조가 근로빈곤 결정에 있어 핵심적이라는 견해가 다수를 이루어 왔다.

근로빈곤의 요인을 분석하는데 있어서도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는데, 근로 빈곤을 촉발하는 생애주기 주요 사건을 제시하거나 구조적 메커니즘을 분석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빈곤 위험을 높이는 요인으로 이른바 촉발 사건(trigger events) 개념은 Bane and Ellwood(1986)의 연구 이후 확대되었다(Jenkins and an Kerm, 2011; 2012; Polin and Raitino, 2014; Van Kerm and Pi Alperin, 2010). 이들은 빈곤 요인을 인구학적 사건과 경제적 사건으로 구분하고, 전자에 가구원의 출생과 사망, 이혼 등에 따른 가족 구성의 변화를, 후자에는 직종 변화와 복지급여 수급 변화, 노동참여 변화(workload)를 언

급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인구학적 사건에는 가구 구성원의 변화와 혼인 및 건강상태, 가구주 변동 등이 있다. 경제적 사건에는 가구 내 근로소득 획득자의 수, 가구의 총 근로시간 및 기간(개월 수), 가구의 주된 소득원의 공적·민간 연금 수입 및 기타 이전 소득 등을 포함한다. 가구 내 근로소득 자가 늘어나고 해당 가구의 총근로시간이 증가할수록 근로빈곤이 감소할 개연성이 커지며, 공적 연금 및 기타 이전 소득은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근로빈곤 해소에 기여할 수 있다. 촉발 사건 개념은 빈곤 이행에 대한 동학적 접근에 적용되어 빈곤 진입 및 탈출에 있어 결정적 계기가 되는 사건과 그 영향요인을 규명하는 연구로 이어졌다. 주로 유럽연합 국가 연구에서는 노동시장 성과 및 공적 이전 급여 수급이 결정적 역할을 담당하며 인구학적 사건도 빈곤 이행의 주된 요인으로 강조된다 (Brulle et al., 2018)

근로빈곤 주요 요인과 메커니즘을 분석한 연구에서는 개별 사건 못지않게 근로빈곤을 낳는 노동시장 내외부의 구조적 조건을 중요시한다. Crettaz (2013)는 근로빈곤 요인을 거시경제 요인과 인구학적 요인, 공공정책 요인으로 구분하고 있다. 거시경제 요인으로는 세계화와 기술 변화의 성격에 따른 노동수요 변화, 거시경제 변동 등이 포함되며, 인구학적 요인에는 가구 구성, 노령화, 이주 인구 변화 등을 포함한다. 공공정책 요인으로는 노동시장 규제와 복지국가의 정책, 교육 및 이주 정책 등을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요인들이 실제 근로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개인 수준에서의 저임금 가구 수준에서의 평균 이하의 노동시간, 가구 수준에서의 평균 이상의 욕구(가구내 아동의 존재와 밀접하게 연관)를 언급하고 있다.

2) 근로빈곤 이론 모형

근로빈곤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왔으나 의외로 근로빈곤의 구조와 동학에 대한 이론적 논의는 부족한 편이다. 서구 선진 자본주의 국가에서도 1970년대 후반 이후 근로빈곤의 재출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나 학문적 연구는 여전히 미흡한 상태이다(Crettaz, 2013). 근로빈곤 연구의 실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있는 메타 연구(Crettaz, 2013, 2015; Thiede et al., 2015, 2016)는 공통적으로 유럽과 북미, 호주권에서 근로빈곤 연구에서 이론적 모형이 부재하고 개념 정의가 모호하며 근로빈곤 위험 집단을 매우 광범위하게 정의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한다. 미국에서는 주로 소수인종과 도심지에서의 근로빈곤 증가에 대한 우려가 197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된 반면, 유럽에서는 근로빈곤을 다분히 미국적 현상으로 규정하면서 2000년대 후반에서야 근로빈곤 연구가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근로빈곤 논의에서 이론적 모형의 부재를 극복하기 위하여 Crettaz와 그의 동료들은 인접학문의 여러 논의를 원용한다(Crettaz, 2013, 2015; Crettaz and Bonoli, 2010, 2011). 특히 거시경제 요인으로는 세계화와 탈산업화, 기술변화가 개별 국가의 노동시장 및 복지제도의 상호작용하여 빈곤 동학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강조한다(Hemerijck and Eichhorst, 2009; Palier, 2010). 그러나 세계화와 기술중심 이론은 다수 저임금 노동자가 빈곤하지 않다는 사실을 설명하지 못하는데, 이는 근로빈곤이 가구 단위에서의 소득 공유와 복지국가 정책, 특히 공적 이전 소득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또한 복지국가 특성이 근로빈곤에 미친 영향에 대한 분석이 부재하다는 점도 비판받고 있다(Andress and Lohmann, 2008; Crettaz, 2011; Fraser et al., 2011).

근로빈곤에 대한 이론 모형을 구축하려는 시도는 주로 유럽 연구에 등장한다. 개인의 노동시장 소득이 가구균등화 가처분 소득에 이르는 과정을 규명한 연구(Strengmann-Kuhn, 2003)에서는 가구 구성원의 소득 공유와 조세 및 공적 이전 급여의 소득 재분배 기능을 포함, 세 단계의 근로빈곤 결정 과정을 제시하고 있다. 가구 조건이 개인의 노동시장 지위만큼이나 근로빈곤 결정에서 중요한 요인인 바, 가구 단위의 자원이 적거나 가구원의 욕구가 높고 노동시장 접근 기회가 제한되면 근로빈곤 위험이 높아진다(Lohmann, 2010). Crettaz and Bonoli(2011)는 근로빈곤으로 이끄는 다양한 미시-거시 수준의 영향요인을 검토하여 세 가지 메커니즘을 제시하고 있는데, 첫째, 낮은 시간당 임금(개인), 2) 낮은 노동시장 결합(가구), 3) 근로가능 성인 대비 자녀의 수(가구당 유년 부양비)가 그것이다. 각 요인이 근로빈곤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은 복지국가 체제에 따라 상이하다.

개인 수준 근로빈곤 결정에 있어 위험 집단 개념도 중요한데, 근로빈곤 위험에 구조적으로 노출된 인구집단은 스킬과 생산성, 노동시장 지위에 따라 상이하다. 주로 저생산성/저임금 경제 부문에 종사하는 저임금과 저스킬 노동자가 위험집단에 포함된다. 노동시장에서의 고용형태, 특히 기간제 및 파견 계약 노동이 근로빈곤 위험을 높인다. 즉, 노동시장 이중구조화 문제가 근로빈곤과 연관되어 있다(Emmenegger et al., 2012). 가구 단위에서 가구의 복지욕구는 주로 편부모 여부, 가족 규모, 아동 유무 등이 포함된다.

Horemans (2016a, 2016b)는 근로빈곤 결정기제로서 다양한 제도적 요인을 고려하고 있다. 노동시장 제도 수준에서는 임금 탈집중화와 조정의 수준, 최저임금 등이 근로빈곤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가구 수준에서 맞벌이 생계부양자에 대한 지원제도, 특히 조세 및 양육 지원제도도 영향을 준다. 사회보장제도와 소득 이전 제도는 복지국가 수준의 주요 요인으로 간주된다. 노동 수요 측면 요인으로서 고용주의 근로시간과 노동수요에 대한 대응 방식, 특히 파트타임 활용 유인이 영향을 미친다. 또한 고용주의 인력 활용 정책은 일자리의 질에 영향을 미쳐 근로빈곤에 영향을 준다(Horemans et al.,

2016). 그러나 이들 제도의 작동 기제는 매우 복잡하여 근로빈곤 동학에 대한 단계적, 구조적 접근이 필요하다.

3) 국내 연구 추이

국내 연구에서는 주로 근로빈곤의 개념정의 및 측정 방법을 둘러싼 논의(남재량 외, 2009; 김교성 외, 2008; 홍경준, 2005; 이병희, 2010)와 노동시장에서 근로빈곤 결정 요인으로 실업/취업의 지속 및 반복의 구조적 동학을 규명한 연구가 주를 이룬다(이병희, 2010, 2012; 이주환·김교성, 2013; 이원진, 2010). 근로빈곤에 대한 사회정책적 배경과 정책방안을 다룬 연구(권순미, 2018; 김교성, 2017; 김윤영·허선, 2017; 김현경, 2015, 노대명 외, 2013; 노대명, 2016; 백학영, 2016; 유길상, 2012; 윤홍식, 2018; 채구묵, 2011)에서는 근로빈곤 확대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정책 방안 등을 포괄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반면, 실증 연구들은 주로 자활 및 취업지원 사업이나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수급 및 빈곤지위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고 있다(구인회 외, 2010; 길현중 외, 2015; 김혜원, 2012; 류만희·유희원, 2012; 박노옥 외, 2012; 박능후·송미영, 2008; 박상현·김태일, 2011; 박상현·최하정, 2011; 박정호, 2010; 박창균·이철인, 2011; 안서연 외, 2011; 이규용 외, 2013; 이상은 외, 2010; 이석민 외, 2015; 전병유 외, 2012).

근로빈곤의 결정요인에 관한 경험 연구도 주로 노동시장 구조변화와 스킬 및 숙련(강금봉, 2016; 이주환·김교성, 2013), 종사상 지위와 고용형태 등의 효과에 집중되어 있다(이진국·최인덕, 2017). 근로빈곤 결정의 다차원성과 구조적 요인에 주목한 연구들도 있는데, 이순아(2016)는 개인 및 가구 특성 등 미시 요인들과 한국사회의 노동시장 및 인구 지표의 독립적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다층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한국의 상대빈곤 심화를 규명하고 있다. 특히 가구 빈곤에서 거시 제반 경제 측면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백학영(2016)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근로빈곤 구조 특성을 분석한 바 있는데, 금융위기 이후 근로빈곤 구조에 단기적으로 큰 변화가 없다는 결론을 제시하고 있다. 2010-11년 기간 동안 근로빈곤 위험이 다소 높아졌으나 전반적으로 근로빈곤 구조에 큰 변화가 없다는 결과를 도출하고 있다. 이주환·김교성(2013)은 근로빈곤층의 노동시장에서의 경력 유형을 빈곤 이력에 따라 빈곤의 지속성과 반복성을 기준으로 일시빈곤, 반복빈곤, 지속빈곤으로 구분하여 지속빈곤층이 저소득 저숙련 일자리를 순환하여 고용과 빈곤의 상호강화 효과를 입증하였다. 이병희(2010, 2012) 또한 실업과 취업의 지속성과 유형을 기준으로 근로빈곤의 구조와 동학을 분석한 바 있다. 그러나 이들 연구는 노동시장에서의 취업·실업 지위를 중심으로 근로빈곤의 구조와 동학

을 규명하는 데에 집중하고 있는 반면, 가구와 복지국가의 소득분배 과정이 근로빈곤에 미친 효과를 본격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거의 없다.

3. 분석틀: 제도의 분배성과와 근로빈곤

본 논문에서는 근로빈곤 결정의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규명하기 위하여 Gerlitz (2018)의 소득 분배 제도 접근법을 적용한다. Gerlitz (2018)는 근로빈곤을 노동시장과 가구, 복지국가라는 개별 제도의 분배 및 재분배 효과를 나타내는 동태적이며 복합적 개념으로 규정한다. 즉, 노동시장에서의 임금과 근로소득이 생성되는 과정과 가구 단위에서 가구 구성원 간 자원을 공유하는 과정, 복지국가의 조세 및 재분배 정책을 통하여 빈곤 해소에 직접 개입하는 과정 등을 복합적으로 분석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분석 전략을 채택하여 그동안 기존 국내연구에서 노동시장에서의 실업과 취업의 지속과 반복을 중심으로 근로빈곤 결정과정을 파악하면서 상대적으로 간과하였던 문제, 즉 노동시장-가구-복지국가의 소득분배 과정 관점에서의 근로빈곤 동학을 규명하고자 한다.

1) 근로빈곤의 단계별 과정

근로빈곤 동학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과 가구, 복지국가 단계에서 빈곤 진입과 빈곤 탈출을 유발하는 촉발 사건 (trigger events)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Polin and Raitino, 2014.). 본 논문은 노동시장에서의 취업을 통한 소득확보, 가구에서의 가구원 간 소득 공유와 기타 소득의 합산, 복지국가 단계에서의 사회보장 기여금 및 조세 지출과 공적 이전 소득의 확보를 핵심적인 촉발 사건으로 간주한다.

각 단계별 근로빈곤 지위를 판별하는 데 있어 빈곤 기준선의 결정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각 단계별 소득유형을 고려하되 빈곤 기준선은 균등화 소득 중위값의 60%를 일관되게 적용한다. 1단계에서는 개인의 임금을 해당 연도 1인 가구의 정상소득의 중위값 기준과 비교하여 근로빈곤 여부를 판정하였다. 즉, 임금 근로빈곤 개념을 적용한 것이다. 2단계는 가구 구성원의 욕구에 따른 근로빈곤 지위를 판별하는 방법으로, 1단계 임금을 가구 규모의 제곱근 값으로 나누어준 가구 균등화 소득을 적용하여, 개인 임금이 가구 균등화 소득 중위값의 60%를 넘지 않는 경우 근로빈곤으로 간주하였다. 이것은 균등화 임금 근로빈곤에 해당한다. 3단계는 가구의 소득 공유과정에 따른 근로빈곤 지위를

판별하는 과정인데, 가구 구성원의 근로소득의 합계가 가구 균등화 소득 중위값의 60% 이하인 경우 근로빈곤으로 정의하였다. 가구 근로소득 빈곤에 해당한다. 4단계에서는 가구원의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기타 소득을 가구 단위에서 합산하고 균등화 과정을 거친 후 근로빈곤 지위를 판정하였다. 이 값은 가구의 시장소득과 일치한다. 즉, 4단계의 근로빈곤은 가구 시장소득 근로빈곤이라 할 수 있다. 5단계에서는 가구 시장 소득에서 사회보장 부담금과 소득세를 차감한 값을 균등화 한 이후 근로빈곤

[그림 1] 가구-노동시장-복지국가 제도의 분배 과정과 근로빈곤 유형

분배 제도	단계	분배 기제	소득유형	빈곤 유형	소득원
노동 시장	1	노동시장 보상	개인 임금	임금 빈곤	임금
		가구 욕구			
가구	2	균등화 개인임금	균등화 개인임금	균등화 임금 빈곤	임금
		근로 소득 공유			
	3	균등화 가구 근로소득	균등화 가구 근로소득	균등화 근로소득 빈곤	근로소득
		기타 소득 공유			
4	균등화 가구 시장 소득	균등화 가구 시장 소득	균등화 시장소득 빈곤	근로소득+ 기타소득민간+ 이전소득	
	사회 보장 기여금 및 소득세				
복지 국가	5	균등화 가구 세전 소득	균등화 가구 세전 소득	균등화 세전소득 빈곤	근로소득+기타소득+ 민간 이전소득 -(사회보장기여금 +소득세)
		공적 이전			
	6	균등화 가구 세후 소득	균등화 가구 세후 소득	균등화 세후소득 빈곤	근로소득+기타소득+ 민간이전소득 -(사회보장기여금 +소득세) +공적이전소득

주: Gertlitz (2017)의 소득분배 과정과 단계별 근로빈곤 분석틀을 수정, 적용함

을 규정하였다. 세전(pre-transfer) 근로빈곤 개념에 해당한다. 6단계는 최종단계로서 5단계 가구 소득에서 공적 이전 소득을 합한 후 균등화하여 그 값을 기준으로 근로빈곤 여부를 판정하였다. 즉, 가구의 가처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빈곤 지위를 판정한 것이다. 공적 이전소득은 사회보험(공적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연간소득)과 사회부조 현금 급여(각종 수당 및 지원금 및 보조금)를 합한 값이다. 최종 단계 근로빈곤으로서 세후 근로빈곤(post-transfer)에 해당한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여, 근로빈곤의 주요 결정요인과 근로빈곤 단계별 빈곤 진입 및 탈출 메커니즘을 제시하고, 노동시장-가구-복지국가 제도의 소득배분 과정과 근로빈곤의 관계를 요약하면 <그림 1>과 같다.

각 단계에서 근로빈곤의 탈출과 진입요인을 고려하여 순근로빈곤 탈출률을 비교할 수 있다. 노동시장에서는 우선 일자리에선 근로를 제공한 데 대한 보상으로서 임금을 확보하여 잠재적으로 근로빈곤 상태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현재 모형에서 1단계의 근로빈곤 상태를 결정하는 데 있어 개인 수준의 임금을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각 집단별로 (1-근로빈곤률)을 빈곤탈출률로 활용한다 (Gertlitz, 2017). 다음으로 가구 단계에서는 빈곤탈출과 빈곤진입을 고려하여 순빈곤탈출률을 측정할 수 있다. 우선 1단계에서 2단계로 진입할 때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가구 욕구가 증가하는 경우 근로빈곤 상태로 진입할 수 있다. 반면 3단계에서는 가구원의 근로소득을 공유하고 4단계에서는 가구원의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공유함으로써 빈곤탈출의 가능성이 열리게 된다. 이때 기타소득의 합산 과정에서 순소득이 부의 값을 갖는 방향으로 증가한다면 빈곤으로 진입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가구 단계에서는 3단계의 빈곤탈출과 4단계의 빈곤탈출률의 합계에서 2단계의 빈곤 진입률을 뺀 값을 순빈곤탈출률로 정의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복지국가의 분배성과에 따른 순빈곤 탈출은 6단계에서 공적 이전소득에 따른 빈곤탈출률을 5단계에서 사회보장 부담금 지출에 따른 빈곤 진입률에서 차감한 값을 순빈곤탈출률로 규정할 수 있다.

2) 데이터와 표본

본 논문의 분석 데이터로는 한국복지패널 4-11차년도 (2008-15) 자료를 활용한다. 근로빈곤의 단계별 추이를 파악하는 데 있어 핵심 변수인 임금 및 근로소득, 기타소득과 사회보장 기여금과 소득세, 정부 이전소득 등 소득 정보와 노동시장 관련 변수인 근로시간과 연간 근로개월 수 변수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종단 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4차년도 이후 패널자료만을 활용한다.

근로빈곤의 노동시장-가구-복지국가 단계별 변동 추이를 파악하기 위해서 기존의 근로빈곤 정의 논의를 참고하여 근로능력이 있으며 연간 근로 개월이 7개월 이상인 표본을 대상으로 단계별 근로빈

근 지위 변화를 파악한다. 노동시장 단계 근로빈곤 여부는 생산가능인구를 고려하여 15세-64세로 제한하고, 분석 대상을 민간 노동력 인구로 한정하기 위하여 직종이 군인인 경우를 제외하였다. 이와 같은 단계를 거쳐 최종적으로 분석에 포함된 표본의 수는 43,038명이었다. 본 논문은 개인과 가구 단위 근로와 빈곤 지위를 결합하고 근로빈곤 단계별 종단 추이를 파악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므로, 모든 분석과정에서 개인 종단 가중치를 부여하였다(김문길 외, 2016).

4. 분석 결과

1) 단계별 근로빈곤률 추이

노동시장의 소득 분배 기제가 근로빈곤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개인 단위 노동시간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기존 연구에서는 주당 노동시간과 연간 근로 개월 수를 기준으로 가구의 노동 강도(Household Work Intensity)를 파악하였다. 또한 일자리의 질은 노동시장에서의 근로빈곤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이라 할 수 있다(Gieβelmann and Lohmann, 2008; Gutiérrez et al., 2011; Halleröd et al., 2015; Horemans, 2016a; Pradella, 2015; Stewart, 2007). 본 논문에서는 노동시장 단계에서의 노동시장 결합 정도와 일자리의 질에 따른 빈곤결정 과정을 파악하기 위하여 전일제-파트타임 여부 변수와 종사상 지위/고용형태 변수를 조합하여 근로시간-종사상 지위 변수를 구성하였다. 각 연도별 표본 분포에 따른 표본 수를 고려하여 전일제-상용직/전일제-임시직/전일제-일용직/파트타임-상용직/파트타임-임시-일용직의 5개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노동시장 결합정도과 고용형태 변수를 조합하여 전일제-직접고용/전일제-간접고용/전일제-특수고용/파트타임-직접고용/파트타임-간접-특수 고용의 5개 범주로 근로시간-고용형태 집단을 구성하였다. 이들 각 집단의 근로빈곤 결정 과정은 주로 노동시장과 가구 단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아래에서는 노동시장 단계(1단계)와 가구 단계(2-4단계)에서의 순빈곤 탈출률 추이를 제시한다.

[표 1] 노동시장-가구-복지국가 단계별 근로빈곤률 추이

(단위: 비율)

제도	노동시장	가구			복지국가	
		1	2	3	4	5
근로빈곤유형	임금빈곤	균등화 임금빈곤	균등화 근로소득 빈곤	균등화 시장소득 빈곤	세전소득 빈곤	세후소득 빈곤
2008	0.137	0.178	0.073	0.105	0.115	0.097
2009	0.144	0.215	0.087	0.115	0.130	0.102
2010	0.151	0.215	0.077	0.105	0.120	0.092
2011	0.161	0.216	0.075	0.097	0.112	0.093
2012	0.136	0.224	0.085	0.104	0.116	0.096
2013	0.115	0.218	0.076	0.112	0.132	0.106
2014	0.134	0.212	0.074	0.105	0.128	0.100
2015	0.136	0.225	0.079	0.100	0.119	0.094
평균	0.139	0.213	0.078	0.105	0.122	0.098

주: 분석 표본은 근로능력이 있는 15-64세의 가구원으로서 조사 기간 해당 년도에 최소 7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한 근로능력자 집단임 (N=43,038).

자료: 한국복지패널 4-11차

<표 1>은 노동시장과 가구, 복지국가의 분배 성과에 따른 근로빈곤률 추이를 연도별로 제시한 것이다. 단계 1의 근로빈곤률은 개인수준에서의 임금 빈곤률로 2008년 13.7%에서 2011년에 16.1%까지 증가하였다가 이후 감소한 후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2015년에는 13.6%에 이르고 있다. 단계 1의 근로빈곤은 개인이 노동시장에서 획득한 임금을 기준으로 각 가구가 1인 가구로 구성되어 있다고 가정할 경우 근로빈곤에 처할 위험을 보여주는 것이다. 단계 2의 근로빈곤률은 개인 단위 근로소득이 가구 규모를 감안한 가구의 기본적 욕구를 얼마나 충족시켰는지를 기준으로 근로빈곤률을 제시한 것이다. 2단계의 근로빈곤률은 가구원의 소득 공유 이전의 개인 단위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근로빈곤을 판정한 것으로 1단계에 근로빈곤 상태에 있지 않던 개인 중 다수가 근로빈곤 지위에 처하게 된다. 2008년 근로빈곤률이 17.8%에서 2012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2.4%에 이르렀으나 이후 다소 감소하였으나 2015년에는 다시 22.5%에 이르고 있다. 단계 3은 가구 수준에서 가구원간 근로소득 공유한 이후 근로빈곤 여부를 판단한 것이다. 2008년에 단계3의 근로빈곤률은 7.3%에서 이후 2009년 일시적으로 8.7%까지 증가하였으나 다시 감소 추세를 보여주고 있으며 2015년에는 7.9%에 이르고 있다. 단계 4의 근로빈곤률은 가구 수준의 근로소득 이외에 재산소득과 기타 사적 현금소득을 합한 것이다. 재산소득과 기타 사적 현금 소득은 부의 값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단계 4의 근로빈곤률은 증

가할 수도 있다. 분석 결과 단계 4의 근로빈곤률은 전체적으로 3단계에 비해 2.7%p 증가하였다. 2008년 단계 4의 근로빈곤률은 10.5%였으며 2009년에 11.5%로 증가하였으며 이후 상승과 감소를 반복하면서 2015년에는 10.0%로 2008년에 비해 약간 감소하였다. 단계 4의 근로빈곤률은 개인의 근로소득 창출을 통한 노동시장에서의 분배성과가 가구 단위의 소득공유와 균등화, 기타 재산소득과 사적 현금 소득 합산 과정 이후의 근로빈곤률로서 가구 단위에서 최종적인 근로빈곤률로 간주된다. 노동시장 단계 근로빈곤률인 단계 1과 단계 4의 근로빈곤률을 비교하면, 근로빈곤률 감소 효과가 약 3.4%p에 해당한다. 2008년에는 근로빈곤 감소효과가 3.2%p였으며 2015년에는 3.6%p로, 가구 단위에서의 분배 과정을 통한 근로빈곤 감소효과가 약간 증가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노동시장에서의 근로소득 확보와 가구 단위에서의 소득 공유 및 기타 소득 합산과정을 거친 이후 복지국가의 소득재분배 기능에 따른 근로빈곤률의 변화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단계 5는 사회보장 기여금과 소득세를 납부함으로써 가구 소득이 감소하여 근로빈곤률이 높아지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단계 6은 단계 5에서 사회보험과 사회부조 현금급여를 포함한 공적 이전소득이 가구 소득에 합산되는 과정으로서 5단계 근로빈곤률을 일부 낮추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단계 5의 근로빈곤률은 평균적으로 12.2%로서 단계 4의 근로빈곤률이 10.5%인 점을 고려하면 사회보장 기여금과 소득세 부담에 따른 근로빈곤 증가율은 약 1.7%p라고 할 수 있다. 2008년에 단계 5의 근로빈곤률은 11.5%였으며 2015년에는 11.9%로 근로빈곤률이 약간 증가하였다. 단계 6의 근로빈곤률을 단계 5의 근로빈곤률과 비교하면 근로빈곤률이 2.4%p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복지국가의 공적 이전 소득을 통한 재분배 효과가 근로빈곤률 감소에 일부 기여한 것으로 확인된다. 요컨대 단계 6의 근로빈곤률은 노동시장과 가구, 복지국가의 분배 기제를 모두 거친 이후 최종적으로 근로빈곤에 처할 위험이 있는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 구성원의 비율로서 평균적으로 9.8%가 근로빈곤 위험에 처해 있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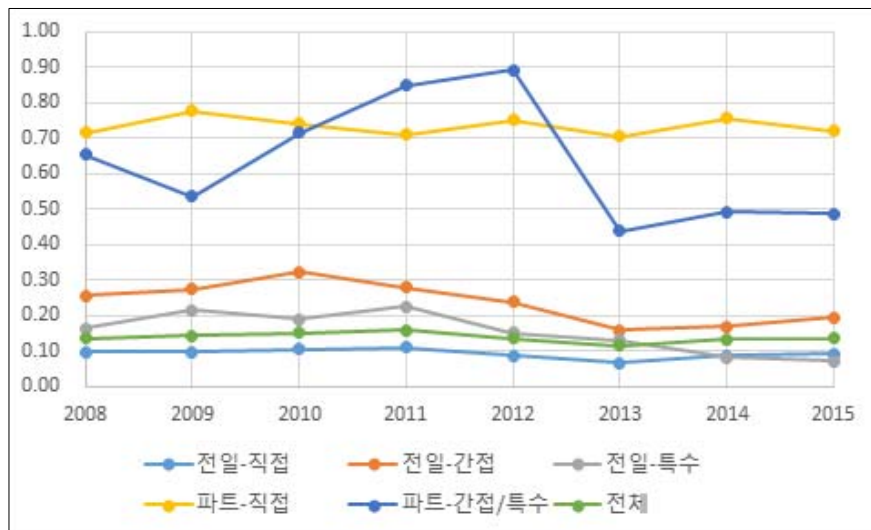
그렇다면, 제도의 분배 과정에 따른 근로빈곤률 변화는 노동시장에서의 지위와 일자리의 질, 가구의 노동강도(Household Work Intensity: HHWI)에 따라 어떻게 변화했는가? 또한 노동시장과 가구, 복지국가의 재분배 효과에 따라 순근로빈곤 탈출 효과는 과연 존재하며, 그 추이는 어떠한가? 아래에서는 순근로빈곤 탈출 효과를 비교 분석하여 위의 질문에 답하고자 한다.

2) 노동시장과 근로빈곤률: 결합 노동시장 지위

노동시장에서 근로빈곤을 결정 중요한 가장 요인으로는 낮은 노동강도와 열악한 일자리의 질이라 할 수 있다. 근로시간이 충분치 않아 노동시장 결합 정도가 낮다는 이른바 노동 강도 가설과 일자리

의 질이 낮아 충분한 소득을 확보해 주지 못한다는 저임금 가설이 있다(Brülle et al., 2018; Giebelmann and Lohmann, 2008; Horemans et al., 2016; Mosthaf et al., 2009; Stewart, 2007). 본 논문에서는 노동 강도와 일자리의 질이 노동시장에서의 근로빈곤과 결합되는 양상을 파악하기 위하여 근로시간과 고용형태/종사상 지위를 함께 고려한 결합 노동시장 지위를 활용하여 근로빈곤 결정 요인을 파악하고자 한다.

[그림 2] 근로시간-고용형태별 노동시장 근로빈곤률(단계 1: 노동시장)



자료: 한국복지패널 4-11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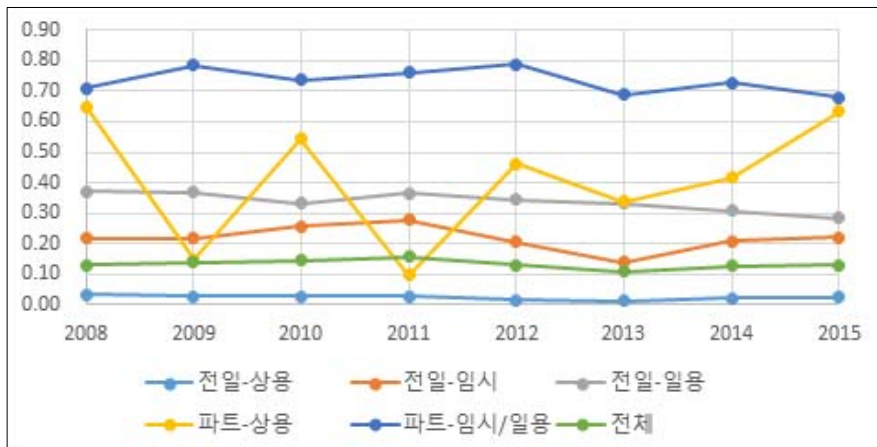
우선 개인 수준의 노동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근로시간 형태 변수를 활용하여 전일제와 파트타임 노동자를 구분한다. 전일제는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파트타임은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40시간 미만인 경우로 분류하였다. 다음으로 종사상 지위는 상용직과 임시직, 일용직 등 임금 근로자 분류 기준을 활용한다. 두 변수를 조합하면 6개의 분류가 가능하지만 파트타임-임시직과 파트타임-일용직은 표본 수가 작아 두 집단을 하나로 결합하여 다섯 개의 결합 노동시장 지위 변수를 구성하였다. 다음으로 고용형태 변수에서 직접고용, 간접고용, 특수고용 분류를 채택하여 근로시간 분류와 결합하였다. 이 변수 또한 6개의 조합이 가능하지만 파트타임-간접고용, 파트타임-특수고용 집단은 표본 수가 작아 하나로 결합하여 다섯 개의 결합 근로시간-고용형태 변수를 구성하였다. 근로시간, 근로시간-종사상 지위 집단과 가구 근로시간-고용형태 집단의 연도별 분포는 <부표

1>, <부표 2>, <부표 3>에 각각 제시되어 있다.

<그림 2>는 결합 근로시간-고용형태 집단별 근로빈곤률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노동시장 지위 변수가 주로 노동시장 단계에서 근로빈곤 결정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단계 1의 임금 근로 빈곤률을 사용하였다.

전체적으로 전일제 노동에 비해 파트타임 노동자의 근로빈곤률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일제-직접고용 노동자의 경우 평균 근로빈곤률이 9.3%인데, 2008년 9.7%에서 2011년까지 증가하다 이후 감소하여 2015년에는 9.2%로 나타나고 있다. 전일제-간접고용 노동자는 2008년 25.8%에서 2015년 19.5%로 약 6.3%p 가량 근로빈곤률이 감소하였다. 흥미롭게도 전일제-특수고용 근로자의 경우 전일제-간접고용 노동자 집단에 비해 근로빈곤률이 낮아 평균 15.4%로 나타났다. 파트타임 노동자 집단의 근로빈곤률은 분석 대상 기간 동안 평균 73.4%와 59.6%로 매우 높았다. 파트타임-직접고용 노동자는 2008년 71.6%에서 빈곤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다 2013년 이후 감소하여 2015년 72.1%에 이르고 있다. 파트타임-간접/특수 고용 근로자 집단은 2008년 65.5% 근로빈곤률에서 2015년에는 48.7%로 근로빈곤률이 약 16.8%p 감소하였다. 근로시간-고용형태 집단별 근로빈곤률 추이 분석 결과, 전반적으로 근로빈곤률이 2008-12년 간에 증가하다 이후 감소하고 있으나 파트타임 근로자의 근로빈곤률이 전일제 근로자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3] 근로시간-종사상 지위별 근로빈곤률(단계 1: 노동시장)



자료: 한국복지패널 4-11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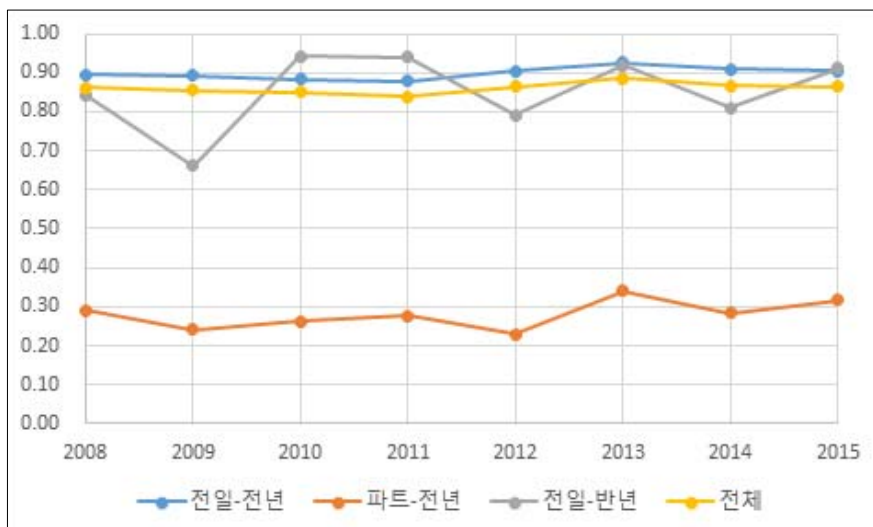
<그림 3>은 근로시간-종사상 지위에 따른 근로빈곤률 추이를 살펴본 것이다. 앞서의 <그림 2>와 같이 전일제 노동자의 근로빈곤률이 평균적으로 파트타임 근로자에 비해 현저하게 낮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종사상 지위와 관계없이 두드러진다. 종사상 지위 측면에서는 전일제 근로자의 경우 상용직의 근로빈곤률이 평균 2.6%p에 불과한 반면, 임시직은 21.8%, 일용직은 34.1%로 상용직과 임시/일용직 집단 간 근로빈곤률이 매우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상용직 노동자의 근로빈곤률은 2008년 3.6%에서 2015년 2.5%로 약 1.0%p 감소하였으며 임시직 근로자는 21.8%에서 22.0%로 약 0.2%p 증가하였으나, 일용직 노동자는 37.3%에서 28.5%로 약 8.8%p 감소하였다. 파트타임 노동자 중에서는 상용직이 42.5%, 임시/일용직이 73.2%로 두 집단간 평균 근로빈곤률 차이가 약 30.7%p로 매우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두 집단 가운데서 상용직은 근로빈곤률이 2008년 64.9%에서 2015년 63.4%로 약 1.5%p 낮아졌다. 임시/일용직 노동자의 근로빈곤률은 동일 기간 약 3.0%p 감소하였다.

지금까지 노동시장에서 근로빈곤률의 결정기제로서 노동강도와 고용형태/종사상 지위의 관계를 검토해 보았다. 전반적으로 전일제 여부가 근로빈곤률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종사상 지위에 따른 차이에서는 상용직에 비해 임시/일용직 종사자의 근로빈곤률이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러한 경향은 전일제-파트타임 집단 모두에서 관찰되었다.

3) 근로시간-노동강도 집단의 단계별 순 근로빈곤 탈출률

<그림 4>는 근로시간-노동강도 집단별로 노동시장 단계에서의 근로빈곤 탈출률 추이를 비교한 것이다. 노동강도는 연간 근로개월 수를 기준으로 11개월 이상인 경우 전년 근로로 11개월 미만인 경우 반년 근로로 분류하였다. 노동시장 단계의 근로빈곤 탈출률은 1에서 근로빈곤률을 제한 값으로 정의하였다. 요컨대 개인이 노동시장에서 보상받은 임금이 1인 가구 기준에서 최저생계수준을 보장해 줄 수 있다면, 노동시장 참여를 통해 잠재적인 근로빈곤 상태에서 탈출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림 4] 순근로빈곤 탈출률(단계1: 노동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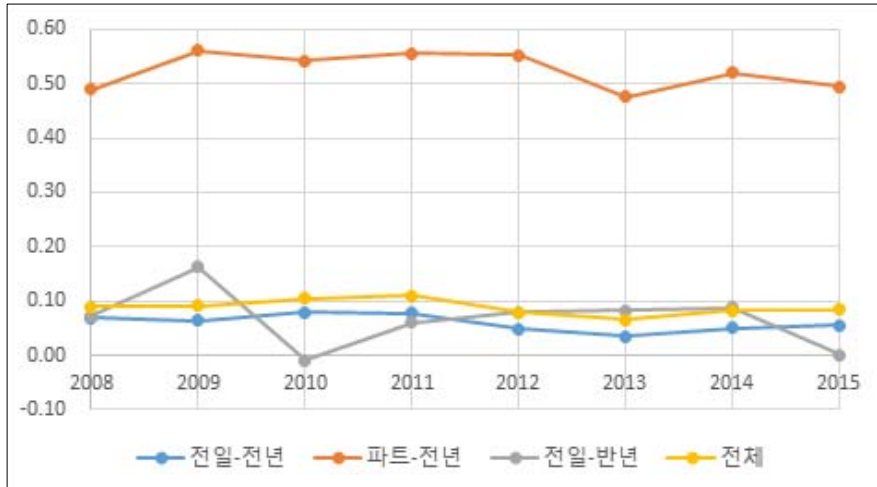


자료: 한국복지패널 4-11차

1단계 근로빈곤 탈출률은 평균 86.1%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다소 변동이 있는데, 2008년 86.3%에서 2011년 83.9%까지 하락한 이후 다시 반등하여 2013년에는 88.5%까지 증가하였다. 이후 다소 감소하여 2015년에는 86.4%에 이르고 있다. 전체적으로 전일-전년 근로자의 근로빈곤 탈출률이 90.0%로 가장 높았으며 전일-반년 노동자 집단이 85.7%를 차지하고 있다. 앞선 분석 결과와 마찬가지로 노동시장 단계에서도 근로빈곤 탈출에 있어 전일제 근로 참여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파트타임-전년 노동자 집단의 근로빈곤 탈출률은 평균 28.4%로 다른 두 집단의 1/3 수준에 불과하다. 2008년 29.0%에서 2012년까지 근로빈곤 탈출률이 23.0%로 감소 추세를 보여주다가 2013년에 34.1%로 급등한 이후 2015년에는 31.8%로 다시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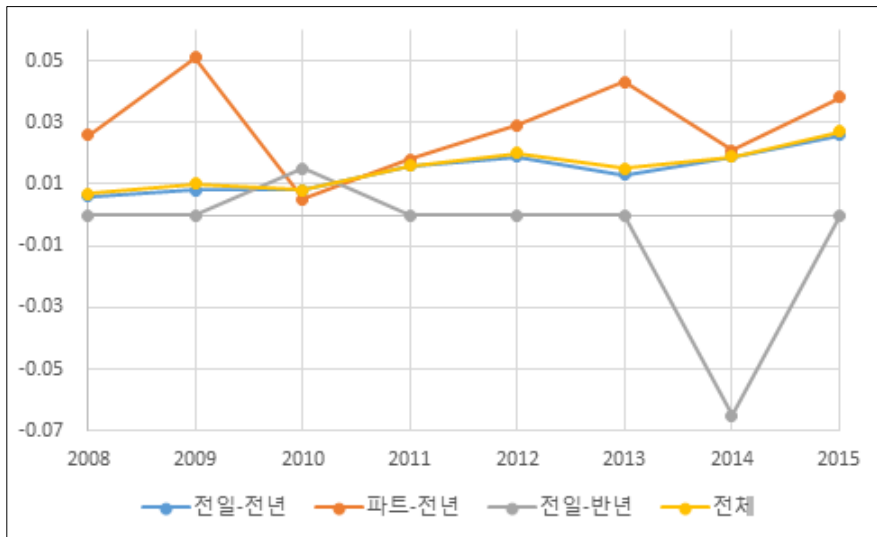
<그림 5>에서 가구 단계 순근로빈곤 탈출률은 파트타임-전년 노동자 집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집단의 탈출률은 2008년 51.5%에서 증가 추세를 보여 2011년까지 57% 내외를 나타냈으나 그 이후 다소 감소하여 2015년에는 51.2%를 기록하였다. 전일제-반년 노동자 집단은 순근로빈곤 탈출률의 변동 폭이 다소 컸다. 평균적으로 7.7%의 탈출률을 보여주고 있는데 2009년 21.3%로 단계적으로 급등한 반면 2015년에는 거의 0%로 확인되었다. 전일제-반년 노동자 집단의 표본 크기가 작다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전체적으로 가구 단계에서 순근로빈곤 탈출률은 9.2%로 나타나고 있으며 2011년 11.3%로 가장 높았으며 2013년에는 6.8%로 가장 낮았다.

[그림 5] 순근로빈곤 탈출률(단계 2-4: 가구)



자료: 한국복지패널 4-11차

[그림 6] 순근로빈곤 탈출률(단계 5-6: 복지국가)



주: 수치는 5단계 빈곤진입률과 6단계 빈곤탈출률을 합한 값으로, 순근로빈곤 탈출률이 음수면 근로빈곤 진입률이 근로빈곤 탈출률보다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함.

자료: 한국복지패널 4-11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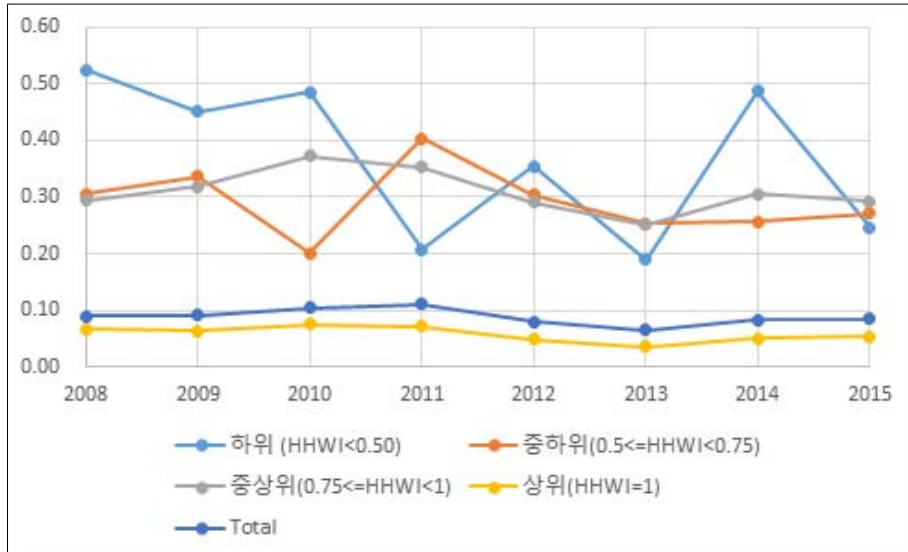
<그림 6>은 복지국가의 재분배 과정을 통한 순근로빈곤 탈출률을 제시한 것이다. 노동시장이나 가족 제도에 비하여 복지국가의 순근로빈곤 탈출률은 상대적으로 낮아 평균 1.5%에 불과하지만 전반적으로 상승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집단별로는 파트타임-전년 노동자 집단의 탈출률이 가장 높았는데 평균적으로 2.9%의 순탈출률을 기록하였다. 근로빈곤 탈출률의 시기별 변동도 큰 편인데, 2009년 5.1%에서 2010년에 0.5%까지 하락하였다가 2015년에는 다시 3.8%로 증가하였다. 전일-반년 노동자 집단은 복지국가를 통한 순근로빈곤 탈출률이 음수로서 빈곤탈출보다 빈곤진입이 높았으며 평균 -0.3%로 나타났다. 2008년 1.5%으로 가장 높았으나 2014년에는 -6.5%로 가장 낮았으며 2015년에는 다시 0%에 수렴하고 있다. 전일제-전년 노동자 집단은 평균 1.5%의 순근로빈곤 탈출률을 보여주고 있으며 연도별 변동 폭은 상대적으로 작고, 전체 변동률과 거의 비슷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2008년에 0.6%로 가장 낮았으며 2015년은 순빈곤 탈출률이 2.56%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복지국가의 소득보장과 조세 정책을 통한 순근로빈곤 탈출률은 노동시장이나 가구 제도에 비해 그 비율이 매우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4) 가구 단위 근로빈곤 결정: 가구원의 노동 강도와 가구내 소득자 수

가구 단계에서는 가구원 수에 따른 기본적인 생활 욕구의 충족, 가구 내 구성원 간의 소득 공유, 민간 이전소득과 자산 소득의 합산 등이 근로빈곤 지위에 영향을 미친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가구 단위 욕구 충족에 있어 가장 큰 요인은 가구원 수라 할 수 있다. 빈곤선 결정 과정에서 가구 균등화 지수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전개되어 온 것 또한 같은 이유 때문이다(Brulle et al., 2018; Thiede et al., 2016). 가구원 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양한 인구학적 요인, 즉 가구원의 사망, 결혼 및 이혼 등에 따른 분가, 출산 등의 요인이 있다. 또한 가구 내 노동인구 대비 부양 아동의 비율 등도 가구원의 욕구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본 연구에서 노동시장-가구-복지국가의 분배 기제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요인은 가구 내 구성원의 노동시장 결합 강도라 할 수 있다. 가구원 중 취업자가 많을수록, 또한 취업자가 보다 많은 노동시간을 투입할수록 가구내 복지 욕구를 감당할 여력이 커지게 된다.

<그림 7>은 가구의 노동 강도 지수(Household Work Intensity=HWI)별 가구 단계에서의 순빈곤 탈출률 추이를 제시한 것이다. 가구 노동강도를 하위(HWI=0.50 이하), 중하위(HWI=0.5-0.75), 중상위(HWI=0.75-), 상위(HWI=1) 가구의 네 집단으로 분류한다. 가구 평균 노동강도 지수가 0.50 이하인 하위 가구는 가구 구성원 다수가 파트타임 혹은 한계 노동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이며, 중하위 가구는 파트타임과 풀타임 노동이 결합된 경우, 0.중상위 가구는 전일제 노동이 다수이나 파트타임 가구원이 있는 경우, 상위 가구는 가구원 전원이 전일제 노동에 종사하고 있는 가구로 분류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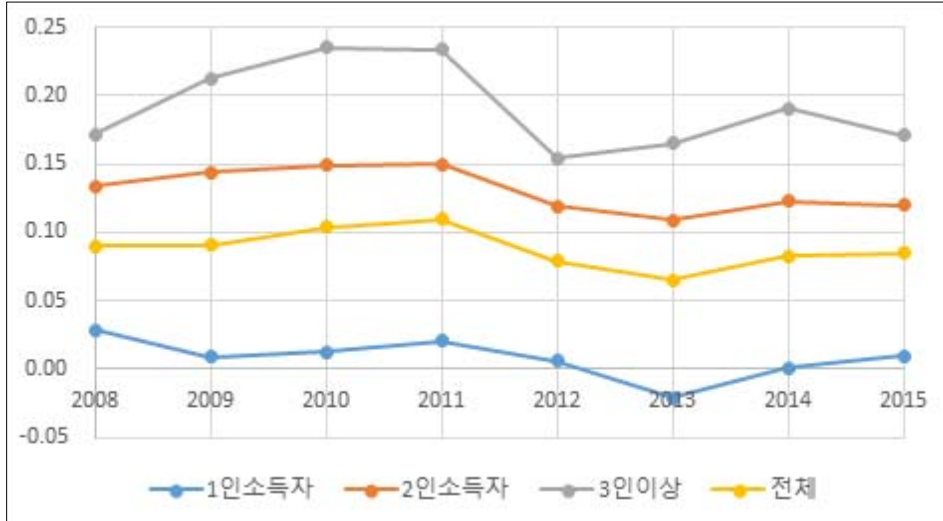
[그림 7] 가구 노동 강도별 순빈곤 탈출률(단계 2-4: 가구)



자료: 한국복지패널 4-11차

전체적으로 가구 수준의 순빈곤 탈출률은 2008년 9.0%에서 외환 위기 직후 2011년에 11.0%로 상승하였으나 이후 전반적인 하락 추세를 보여 2015년에는 8.5% 수준에 이르고 있다. 가구 노동강도에 따라 집단 간 차이가 발견되는데, 상위(전일제 노동) 가구는 순빈곤 탈출률이 전체 평균과 비슷한 추세를 보여주고 있으나, 나머지 세 집단은 중단 변화가 매우 큰 편이다. 우선 노동강도가 가장 낮은 하위 가구 집단은 순빈곤 탈출률의 변동 폭이 매우 크다. 외환위기 직후인 2010년에 순빈곤 탈출률이 52.5%에 육박하였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11년에는 20.8%까지 하락한 이후 등락을 거듭하다 2015년에는 24.6%에 머물렀다. 중하위 가구는 2009년에 순빈곤 탈출률이 33.6%로 증가하였으나 이후 등락을 반복하면서 2015년에는 27.2%에 이르고 있다. 중상위 가구도 빈곤 탈출률 30% 내외에서 전체 가구 평균과 유사한 추세로 변동하였다.

[그림 8] 소득자 수별 가구 단계 근로빈곤 순탈출률 (단계 2-4: 가구)



자료: 한국복지패널 4-11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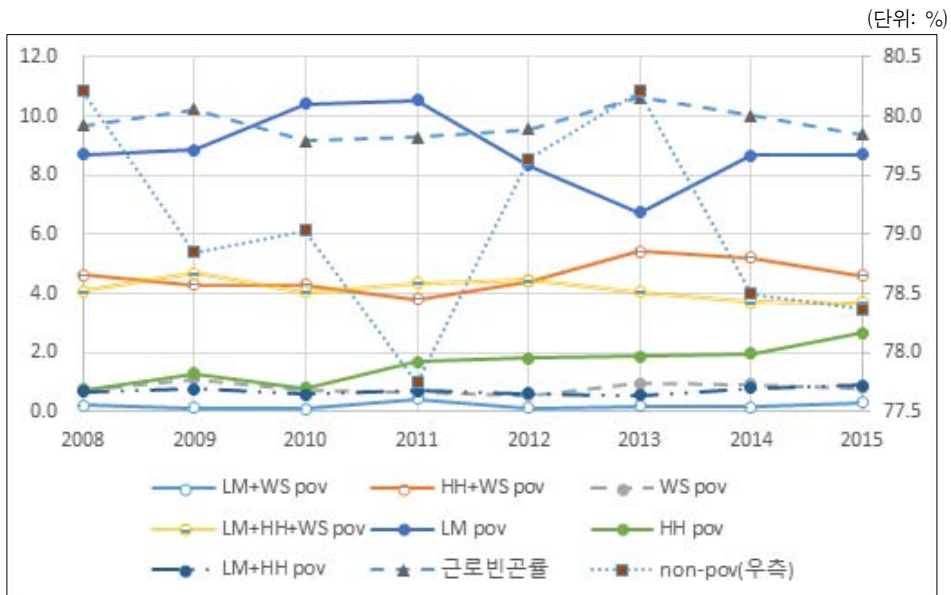
<그림 8>은 가구 소득자 수별 순빈곤 탈출률을 제시한 것이다. 평균적으로 2008년 순빈곤 탈출률이 9.0%에서 2011년에 11.0%로 상승한 후 점차적으로 하락 추세를 보여 2015년에는 8.5%에 이르고 있다. 소득자 수별 빈곤탈출률 추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발견된다. 우선 1인 소득자 가구의 빈곤 탈출률은 가장 낮아, 2008년 2.9%에서 2015년에는 1.0%에 그치고 있다. 2인 소득자 가구의 빈곤 탈출률 추이도 전체 평균과 거의 흡사한데 전반적인 빈곤 탈출률은 높은 편이다. 2008-11년 기간 동안 13-15% 수준에서 2015년에는 12.0%로 하락하였다. 3인 이상 소득자 가구의 경우 가구 빈곤 탈출률은 2009년 21.3%로 가장 높았으나, 2015년에는 17.1%로 하락하였다. 전체적으로 가구 욕구 증대와 가구원 간 소득 공유를 감안한 순빈곤 탈출률은 3인 이상 다수 소득자 가구에서 높았으나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5) 노동시장-가구-복지국가 빈곤의 종합적 분포

지금까지 노동시장에서의 임금 보상에 따른 근로빈곤 결정, 가구 단위에서 가구 욕구 충족과 근로 및 기타 소득 공유에 따른 근로빈곤 결정, 복지국가의 재분배 과정을 거친 이후 근로빈곤 추이를 차례대로 살펴보았다. 각 단계에서 근로빈곤의 핵심 기제로서 노동시장에서는 근로시간 유형과 종사상 지위, 고용형태에 따라 집단별 근로빈곤에 큰 차이가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가구 단위에서는

가구 내 노동자 수와 노동공급 양상을 기준으로 가구 노동강도와 가구 내 노동자 수에 따라 근로빈곤 결정과 탈빈곤 동학에 변화가 있음을 살펴보았다. 복지국가 단계에서는 공적 이전소득과 사회보장 기여금과 소득세 납부에 따른 근로빈곤률 변화 과정을 분석하였다. 아래에서는 노동시장과 가구, 복지국가 제도의 분배 기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근로빈곤의 유형을 구분하고 각 유형별 근로빈곤률 변화 추이를 파악할 수 있게 된다.

[그림 9] 소득 분배 과정과 근로빈곤-비빈곤 유형별 추이 (2008-15년)



주: LM-노동시장, HH-가구, WS-복지국가, non-pov-비위험 집단, +는 두 가지 이상 단계에서 동시적으로 근로빈곤상태임을 뜻함.
 자료: 한국복지패널 411차

<그림 9>에서는 우선적으로 근로빈곤 여부는 노동시장-가구-복지국가의 분배 과정을 거친 이후 최종적으로 단계 6에서 근로빈곤 상태에 있는지 여부에 따라 최종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아래 그림에서 우측 종축을 기준으로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항목이 바로 근로빈곤률인데, 최종적으로 관측되는 근로빈곤 지위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그림에서 살펴보면, 근로빈곤률은 조사기간 동안 평균적으로 9.75%였는데 2008년 9.68%에서 다소 등락을 거듭한 이후 2015년에는 9.38%로 약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배 과정에 따라 노동시장, 가구, 복지국가의 각 제도별 최종 단계에서 근로빈곤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데, 이를 각각 노동시장 근로빈곤, 가구 근로빈곤, 복지국가 근로빈곤으로 분류할 수 있다. 또한 개별 단계의 최종적 근로빈곤 상태를 조합하여 노동시장(LM pov)+복지국가 근

로빈곤(WS pov), 가구+복지국가 근로빈곤(HH+WS pov), 노동시장+가구+복지국가 근로빈곤(LM+HH+WS pov)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이들 단계의 조합에 따른 근로빈곤 상태의 합계는 근로빈곤률과 일치한다. 다음으로 최종 단계 6에서 근로빈곤은 아니지만 노동시장이나 가구 단계에서 일시적으로 근로빈곤 상태에 처한 경우를 가정할 수 있다. 이를 각각 노동시장 근로빈곤(LM pov), 가구 근로빈곤(HH pov), 노동시장+가구 근로빈곤(LM+HH pov) 상태로 표시한다. 마지막으로 단계 6에서 최종적으로 근로빈곤 상태에 있지 않았으며, 가구와 노동시장 단계에서도 한 번도 근로빈곤 위험에 처하지 않은 집단을 비위험 집단(non-pov)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 집단은 노동시장에서의 소득 확보와 가구에서의 소득공유, 복지국가의 재분배 과정에서 근로빈곤 위험에 한 번도 처하지 않은 집단이라 할 수 있다.

각 단계별 근로빈곤률의 추이를 살펴보면, 우선 최종 단계에서 빈곤 집단 중에서는 노동시장+가구+복지국가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빈곤 상태에 머문 집단의 비율이 4.12%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 집단의 비중은 2008년 4.08%에서 2015년 3.68%로 약 0.40%p 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노동시장 임금 수준은 근로빈곤 상태에 있지 않았으나 가구+복지국가 단계(HH+WS pov)에서 근로빈곤에 처한 집단의 비율이 평균 4.6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가구+복지국가 근로빈곤률은 2008년 4.64%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2013년에 5.44%로 증가한 후 다시 감소 추세로 돌아서 2015년에는 4.59%로 나타났다. 노동시장과 가구 단계에서 근로빈곤 상태에 머물지 않았으나 복지국가의 재분배 과정에서 근로빈곤 상태에 처한 집단(WS pov)은 평균적으로 0.82%로 매우 낮았다. 이 집단의 비중은 연도별 변화의 폭이 상당하였는데 2009년에는 1.11%로 증가하였다가 2015년에는 다시 0.80%로 감소하였다. 노동시장과 복지국가 단계에서 근로빈곤에 처한 집단의 비율은 가장 낮아 평균적으로 0.21%를 나타내고 있다.

다음으로 최종적으로 근로빈곤 상태에 있지 않았으나 노동시장과 가구 단계에서 일시적으로 근로빈곤 상태에 머물렀던 집단의 비중은 분석 기간 동안 각각 평균적으로 8.85%와 1.64%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노동시장과 가구 단계에서만 빈곤 상태에 머문 집단은 0.70%를 차지하고 있다. 요컨대 소득 배분 과정의 중간단계에서 근로빈곤 상태에 있던 집단 가운데 노동시장 근로빈곤의 비율이 2008년에는 8.70%에서 2011년까지 증가추세를 보여주다가 2015년에는 다시 8.69%로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가구 단계에서 일시적 근로빈곤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8년 0.74%에서 2015년에는 2.66%를 차지하고 있다. 노동시장+가구 단계 근로빈곤률은 큰 변동 없이 약 0.7% 내외에 머물고 있다. 소득 분배의 전체 과정에서 한 번도 근로빈곤 위험에 처하지 않은 집단은 약 79%를 차지하고 있는데 연도별로는 변동 추이가 다소 있다. 2008년 80.2%가 빈곤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있었는데

2015년에는 그 비중이 78.4%로 약간 감소하였다. 최종 단계 근로빈곤률이 2013-15년간 다소 감소한 것을 반영하듯이 근로빈곤 위험에 노출된 집단의 비중도 약간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5. 결론 및 시사점

지금까지 노동시장과 가구, 복지국가 제도가 근로빈곤에 미치는 영향을 분배과정을 중심으로 파악하였다. 노동시장 단계에서 근로빈곤률은 2011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다시 감소 추세에 있었다. 근로시간과 고용형태에 따른 차이가 두드러졌는데 외환위기 이후 비전형 근로 및 저임금 부문 증가로 빈곤 임금 집단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노동시장에서 가구 단계로의 빈곤진입률은 2011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이후 감소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가구 단계에서 규모에 따른 욕구 변화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방향으로 전환된 것으로 간주된다. 반면 가구 단계 소득공유는 근로빈곤 감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만 기타 소득은 탈근로빈곤에 미치는 영향이 분석 기간 초반에는 약화되었다가 이후 다시 상승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복지국가 단계에서 사회보장 부담금과 조세 효과는 파트타임 노동자에서 증감을 반복하였으며, 전일-전년 노동자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가 증가 추세를 보였다. 반면 공적 이전 소득 효과는 증감을 반복한 이후 감소 추세에 있으며, 풀타임-반년 근로자 집단도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 제도 단계별 근로빈곤의 구조와 동학을 분석한 결과, 분석 기간 전반부에서 근로빈곤률이 증가하다가 후반부에서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노동시장 단계 근로 빈곤률은 평균적으로 약 13.9%이며 가구 단계에서는 근로빈곤률이 3.4%p 감소하여 10.5%에 이르고 있으며 복지국가 단계에서는 약 0.7%p 감소되어 평균 9.8%가 근로빈곤 상태에 있었다.

노동시장 단계에서 근로빈곤 수준과 빈곤 탈출을 근로시간 및 종사상 지위/고용형태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전일제 집단이 파트타임 근로에 비해 근로빈곤률이 전반적으로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임시일용직 노동자 집단은 상용직에 비해 근로빈곤률이 높았으며 이러한 경향은 전일제와 파트타임 양 집단 모두에서 관찰되었다. 고용형태별로는 직접고용 노동자 집단의 근로빈곤률이 가장 낮았으며 파트타임 내에서 직접 고용과 간접/특수 고용 집단 간의 근로빈곤률은 상대적으로 일관된 경향을 보여주고 있지 않았다.

노동시장 단계에서 빈곤 진입과 빈곤 탈출을 함께 고려하여 순빈곤탈출률을 분석한 결과 파트타임-전년 노동자 집단의 근로빈곤 탈출률이 전일제 집단에 비해 약 1/3 수준으로 낮았다. 반면, 가구

단계에서 순근로빈곤 탈출률은 파트타임-전년 노동자 집단이 가장 높아 파트타임 노동자 집단이 가구 단계에서 소득 공유를 통하여 근로빈곤에서 주로 벗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복지국가 단계에서 근로빈곤 탈출률은 전반적으로 낮았으나 마찬가지로 파트타임-전년 노동자 집단의 탈출률이 평균적으로 2.9%로 가장 높았다.

가구 단위의 근로빈곤 결정에 있어 가구 노동강도와 가구 소득자 수에 따른 빈곤 탈출률을 분석한 결과, 노동강도 하위 집단의 순빈곤 탈출률의 변동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중하위 가구와 중상위 가구의 순빈곤 탈출률도 약 30% 내외를 보여주었다. 가구의 순빈곤 탈출률은 하위 및 중상위 노동 강도 가구에서 가장 높았으며 중하위 노동강도 집단이 그 뒤를 이었다. 가구 노동강도가 빈곤탈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그 관계가 선형적인 것은 아니었다.

노동시장-가구-복지국가의 제도 단계별 빈곤 구조를 살펴보면 근로빈곤 집단은 주로 가구-복지국가 단계에서 근로빈곤 위험에 처하거나 노동시장-가구-복지국가 단계 내내 근로빈곤 위험에 처하고 있으며 두 집단의 규모가 전체 근로빈곤률(평균 9.75%)의 90%를 차지하고 있었다. 근로빈곤 위험에 노출된 적이 전혀 없는 비위험 집단은 약 80%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비중은 크게 변화하지 않았다.

본 논문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근로빈곤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는 사회정책 관점에서 보다 좋은 일 자리를 창출하고 노동시장 규제완화가 파트타임 노동자의 근로빈곤에 미칠 영향을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회서비스와 사회수당 등 복지국가의 개입이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원의 욕구를 충족하는데 얼마나 기여하는지에 대한 추가 연구도 필요하다. 가구원의 노동시장 참여 수준과 노동시장 접근 기회를 확대해 줄 수 있는 취업지원 정책의 효과도 보다 엄격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물론 취약계층의 노동시장 진입 촉진이 근로빈곤 확대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파악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근로빈곤의 구조와 동학을 가구-노동시장-복지국가의 분배과정을 고려한 모형을 적용하여 분석했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 그간 근로빈곤 연구가 근로 및 빈곤 개념의 규정과 측정 문제를 주로 다루거나 노동시장에서의 취업/실업 지위의 지속과 반복을 통해 빈곤 동학을 규명하는데 주력한 반면, 상대적으로 제도의 분배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접근이 결여되어 있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또한 근로빈곤의 단계별 규모와 변화 추이, 빈곤 탈출과 진입 과정을 체계적으로 규명하고자 시도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몇 가지 한계를 갖는다. 우선 근로빈곤 동학에 핵심적인 변수인 근로시간과 근로개월 변수의 제한으로 복지패널의 4·11차도 자료만을 활용할 수밖에 없어 근로빈곤의 장기 동학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둘째,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노동시장 구조개혁과 그에 따른 주변부에

서의 노동시장 규제완화와 유연화, 기초생활보장 제도 개편과 사회수당 및 관련 제도 도입을 둘러싼 변화의 효과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 셋째, 근로시간과 노동강도 등 변수를 중심으로 집단 수준의 근로빈곤률과 동학에 집중한 바, 개인 수준의 다중회귀분석으로 노동시장과 가구, 복지국가 단위의 각 요인들이 근로빈곤 결정 및 탈빈곤에 미치는 효과를 비교하지는 못하였다. 후자의 방법이 기존 연구에서 많이 활용된 것도 있으나, 노동시장과 가구, 복지국가 개별 제도의 효과를 함께 비교할 수 있는 정교한 연구 방법론에 대한 검토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향후 보다 근로와 빈곤에 관한 보다 장기적인 데이터를 확보하여 근로빈곤의 구조와 동학이 노동시장과 가구, 복지국가의 단계에 따라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보다 엄격하게 규명할 필요가 있다. 또한 근로빈곤의 촉발사건과 가구 구성 및 인구학적 변화, 사회보험 및 공적 이전 급여 외에 복지국가의 사회서비스 확대에 따른 효과를 복합적으로 분석해야 할 과제가 남겨져 있다.

■ 참고문헌 □

- 강금봉(2016). 임금 근로빈곤층의 빈곤 탈출에 미치는 요인분석. 노동정책연구. 16(1). 27-56.
- 고혜진, 조효진(2018). 고용중심 복지국가의 고용과 재정 성과. 한국사회정책. 25(2). 305-332.
- 구인회, 임세희, 문혜진(2010).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근로, 소득, 빈곤에 미친 영향. 한국사회학. 44(1). 123-148.
- 권순미(2018). 발전주의 복지국가에서 사회투자국가로. 한국사회정책. 25(1). 231-257.
- 길현중, 이병희, 이정희, 이현주(2015). 근로빈곤층 취업 우선 지원사업 성과 평가 및 개선 방안. 한국노동연구원, 고용노동부.
- 김교성(2017) 외환위기 20 년, 소득보장정책의 발전과 한계. 한국사회정책. 24(4). 151-184.
- _____, 김성욱, 이정면, 노혜진(2008). 빈곤의 측정과 규모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19. 297-319.
- 김문길, 김태완, 오미애, 박형준, 신재동, 정희선, 김태성(2016). 2016년 한국복지패널 기초분석 보고서.
- 김윤영, 허선(2017). 개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평가와 과제.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53-58.
- 김현경(2015). OECD 국가의 최저임금제와 빈곤탈출. 보건복지포럼, 78-86.
- 김혜원(2012). 근로빈곤층 직업훈련의 취업 성과 연구. 경제발전연구. 18. 159-194.
- 남재량, 안태현, 안종범, 전영준(2009). 근로빈곤 대책연구 I. 한국노동연구원.
- 노대명(2016). 맞춤형 급여체계 도입 이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평가와 향후 정책과제. 보건·복지 Issue&Focus, 1-8.
- _____, 이현주, 최현수, 강명구, 박노옥, 이병희, 장원봉, 전병유, 우선희, 박형준(2013). 일을 통한 빈곤탈출지원 추진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류만희, 유희원(2012). 자활사업의 취·창업 성과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사회복지학. 43. 605-637.
- 박노옥, 노대명, 류만희, 서광국, 임소영, 한경진(2012). 희망리본 시범사업 성과평가 및 본 사업 추진 방안. 한국조세연구원.
- 박능후, 송미영(2008).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격 적격성 연구-사각지대와 부정수급집단의 특성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39. 287-314.
- 박상현, 김태일(201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노동 공급과 성과에 미치는 영향. 한국정책학회보. 20(4). 277-307.
- 박상현, 최하정(201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소득·소비에 미치는 효과 분석.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1(4). 175-213.
- 박정호(2010). 자활사업 참여자의 특성과 자활성과. 사회복지연구. 41(3). 163-184.

- 박창균, 이철인(2011). 자활근로사업의 근로유인효과에 관한 실증분석. *경제학연구*. 59(3). 149-186.
- 백학영(2016). 금융위기 전후 근로빈곤 구조의 변화 탐색. *사회과학연구*. 55(1). 181-207.
- 안서연, 구인회, 이원진(201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탈출 결정요인: 근로능력자 집단별 분석. *사회복지정책*. 38(1). 199-226.
- 유길상(2012). 이행노동시장 관점에서 본 고용·복지 연계 방안 및 사회안전망 강화 방안. 제5차 고용유인형 사회안전망 연구위원회 회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 윤홍식(2018). 소득주도성장과 한국 복지체제의 유산. *한국사회정책*. 25(2). 243-280.
- 이규용, 강병식, 김동현, 노용진, 문병기, 반정호, 안준기, 장은숙(2013). 취업취약계층 노동시장정책 효율화 방안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 이병희(2010). 근로빈곤의 노동시장 요인과 빈곤 동학. *경제발전연구*. 16. 93-116.
- _____ (2012). 비공식근로와 빈곤. *한국사회정책*. 19(1). 39-63.
- 이상은, 권혁창, 전세나(2010). 한국 자활사업의 비용-편익분석 연구. *사회복지연구*. 41(3). 299-326.
- 이석민, 박소라, 김수호(2015). 공적이전소득이 근로소득과 사적이전소득에 미치는 영향: 국민기초생활보장 장기수급자의 구조적 문제 분석. *행정논총*. 53(3). 171-195.
- 이순아(2015). 한국사회 가구빈곤의 결정요인에 관한 다층분석. *한국사회학*. 49(1). 139-177.
- 이원진(2010).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동태의 특성 및 수급탈출의 결정요인 분석. *한국사회복지학*. 62(3). 5-29.
- 이주환, 김교성(2013). 근로빈곤층의 빈곤이력과 노동경력. *사회복지연구*. 44(3). 323-346.
- 이진국, 최인덕(2017). 후기산업화시기 청년빈곤 영향요인의 변화에 관한 연구-1999 년과 2014 년의 비교를 중심으로. *사회보장연구*. 33(2). 103-128.
- 전병유, 김혜원, 김용주, 이병희, 최형재, 황덕순(2012). 취업성공패키지 성과분석 및 개선방안. 고용노동부.
- 채구묵(2011). OECD 주요국의 실업급여제도의 유형별 비교, *한국사회학*. 45(1). 1-36.
- 홍경준(2005). 근로빈곤층에 대한 탐색적 연구: 개념정의와 실태파악, *한국사회복지학*. 57(2). 119-142.
- Andress, H.-J. & Lohmann, H. (2008). *The Working Poor in Europe: Employment, Poverty and Globalisation*. Cheltenham, UK and Northampton, MA: Edward Elgar Publishing.
- Atkinson, T., Cantillon, B., Marlier, E. & Nolan, B. (2002). *Social indicators-The EU and social inclusion*. Oxford, UK: Oxford University Press.
- Brülle, J., Gangl, M., Levanon, A. & Saburov, E. (2018). Changing labour market risks in the service economy: Low wages, part-time employment and the trend in working poverty risks in Germany. *Journal of European Social Policy*. 0958928718779482.
- Cantillon, B. (2011). The paradox of the social investment state: growth, employment and poverty in the Lisbon era. *Journal of European Social Policy*. 21(5). 432-449.

- Crettaz, E. (2011). *Fighting Working Poverty in Postindustrial Economies: Causes, Trade-Offs and Policy Solutions*. Cheltenham, UK and Northampton, MA: Edward Elgar Publishing.
- _____. (2013). A state-of-the-art review of working poverty in advanced economies: theoretical models, measurement issues and risk groups. *Journal of European Social Policy*, *23*(4), 347-362.
- _____. (2015). Poverty and material deprivation among European workers in times of crisis.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al Welfare*, *24*(4), 312-323.
- Crettaz, E., & Bonoli, G. (2010). *Why Are Some Workers Poor? the Mechanisms that Produce Working Poverty in a Comparative Perspective*, REC-WP 12/2010 Working Papers on the Reconciliation of Work and Welfare in Europe
- _____. & _____. (2011). Worlds of working poverty: National variations in mechanisms. In N. Fraser, R. Gutierrez, & R. Pen~a-Casas (Eds.), *Working poverty in Europe: A comparative approach* (pp. 46-69). Basingstoke, UK: Palgrave Macmillan.
- Eichhorst, W., Kaufmann, O., Konle-Seidl, R., & Reinhard, H. J. (2008). Bringing the jobless into work? An introduction to activation policies. In W. Eichhorst, O. Kaufmann, & R. Konle-Seidl (Eds.), *Bringing the jobless into work? Experiences with activation schemes in Europe and the US* (pp. 1-6). Berlin/Heidelberg: Springer.
- Emmenegger, P., Hausermann, S., Palier, B. & Seeleib-Kaiser, M. (2012). *The Age of Dualization: The Changing Face of Inequality in Deindustrializing Societie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European Commission. (2004). *Joint report on social inclusion 2004*. Luxembourg: European Communities.
- _____. (2010). *Europe 2020: A strategy for smart, sustainable and inclusive growth*. Brussels: European Commission.
- Fraser, N., Gutierrez, R. & Pena-Casas, R. (2011) *Working Poverty in Europe. A Comparative Approach*. Basingstoke: Palgrave Macmillan.
- Gerlitz, J. Y. (2018). Rising In-work Poverty in Times of Activation: Changes in the Distributive Performance of Institutions over Three Decades, Germany 1984-2013. *Social Indicators Research*, *140*(3), 1109-1129.
- Gieβ elmann, M. & Lohmann, H. (2008). The different roles of low-wage work in Germany: regional, demographical and temporal variances in the poverty risk of low-paid workers. In H.-J. Andreβ & H. Lohmann (Eds.), *The working poor in Europe: Employment, poverty and globalization* (pp. 96-23). Cheltenham, UK/Northampton, MA, USA: Edward Elgar.
- Goerne, A. (2011). A comparative analysis of in-work poverty in the European Union. In N. Fraser, R. Gutierrez, & R. Pen~-Casas (Eds.), *Working poverty in Europe: A comparative approach* (pp. 15-5). Basingstoke, UK: Palgrave Macmillan.

- Gutiérrez, R., Ibáñez, M., & Tejero, A. (2011). Mobility and persistence of in-work poverty. *Working Poverty in Europe*, 175-201.
- Hallerod, B., Ekbrand, H., & Bengtsson, M. (2015). In-work poverty and labour market trajectories: Poverty risks among the working population in 22 European countries. *Journal of European Social Policy*, 25(5), 473-88.
- Hemerijck, A., & Eichhorst, W. (2009) Whatever Happened to the Bismarckian Welfare State? Discussion Paper No. 4085. Bonn: IZA.
- Horemans, J. (2016a). The part-time poverty gap across Europe: How institutions affect the way part-time and full-time workers avoid poverty differently.
- _____. (2016b). Polarisation of non-standard employment in Europe: Exploring a missing piece of the inequality puzzle. *Social Indicators Research*, 125(1), 171-189.
- _____, Marx, I. & Nolan, B. (2016). Hanging in, but only just: part-time employment and in-work poverty throughout the crisis. *IZA Journal of European Labor Studies*, 5(1), 5.
- Immervoll, H., & Richardson, L. (2011). Redistribution Policy and Inequality Reduction in OECD Countries: What Has Changed in Two Decades?, discussion paper, No. 6030, IZA.
- Jenkins, S. & Van Kerm, P. (2011). patterns of persistent poverty: evidence from EU-SILC. ISER Working paper no. 30, Institute of Social and Economic Research.
- _____. & _____. (2012). The relationship between EU indicators of persistent and current poverty' IZA Discussion Paper no. 7071, Institute for the Study of Labor, Bonn, Germany.
- Lohmann, H. (2009). Welfare States, Labour Market Institutions and the Working Poor: A Comparative Analysis of 20 European Countries. *European Sociological Review*, 25(4), 489-04.
- Marchal, S., & Marx, I. (2018). Stemming the tide: What have European Union countries done to support low-wage workers in an era of downward wage pressures?. *Journal of European Social Policy*, 28(1), 18-33.
- Mosthaf, A., Schank, T. & Schnabel, C. (2009). Low-wage employment versus unemployment: which one provides better prospects for women?. IZA Discussion Paper no. 4611, Institute for the Study of Labor, Bonn, Germany.
- OECD. (2015). In it together: Why less inequality benefits all. Paris: OECD Publishing.
- Palier, B. (Ed.). (2010). A long goodbye to Bismarck?: the politics of welfare reforms in continental Europe. Amsterdam University Press.
- Polin, V. & Raitano, M. (2014). Poverty transitions and trigger events across EU groups of countries: Evidence from EU-SILC. *Journal of Social Policy*, 43(4), 745-772.
- Pradella, L. (2015). The working poor in Western Europe: Labour, poverty and global capitalism. *Comparative European Politics*, 13(5), 596-613.
- Strengmann-Kuhn, W. (2003). Armut trotz Erwerbstätigkeit: Analysen und sozialpolitische

Konsequenzen. Frankfurt/Main: Campus Verlag.

- Stewart, M. B. (2007). The interrelated dynamics of unemployment and low-wage employment. *Journal of applied econometrics*, *22*(3), 511-531.
- Thiede, B. C., Lichter, D. T. & Sanders, S. R. (2015). America's working poor: Conceptualization, measurement, and new estimates. *Work and Occupations* *42*(3), 267-312.
- Thiede, B. C., Lichter, D. T. & Slack, T. (2016). Working, but poor: The good life in rural America?. *Journal of Rural Studies*.
- Van Kerm, P. & Pi Alperin, M. (2010). Inequality, growth and mobility: the intertemporal distribution of income in European countries 2003-2007' Methodologies and Working Papers Series, Catalogue Number KS-RA-11-003-EN-N, Eurostat, Luxembourg.
- Van Winkle, Z. & Struffolino, E. (2018). When working isn't enough: Family demographic processes and in-work poverty across the life course in the United States. *Demographic Research*, *39*, 365-380.

[부표 1] 연도별 근로시간-연간 근로개월 수 분포

(단위: %)

연도	전일-전년	파트-전년	전일-반년	전체
2008	93.91	5.01	1.08	100
2009	93.92	5.35	0.73	100
2010	93.47	5.66	0.87	100
2011	92.81	6.61	0.58	100
2012	93.70	6.02	0.29	100
2013	92.40	7.02	0.58	100
2014	92.71	6.89	0.40	100
2015	92.48	6.99	0.53	100
평균	93.15	6.23	0.62	100

[부표 2] 연도별 근로시간-고용형태 분포

(단위: %)

연도	전일-직접	전일-간접	전일-특수	파트-직접	파트-간접/특수
2008	86.58	4.02	4.42	4.37	0.61
2009	87.81	3.85	2.99	4.95	0.39
2010	88.04	3.16	3.15	5.12	0.53
2011	87.19	3.09	3.11	5.99	0.62
2012	87.85	2.92	3.21	5.27	0.74
2013	86.01	4.35	2.62	5.83	1.19
2014	86.74	3.49	2.88	5.81	1.08
2015	86.49	3.22	3.29	5.83	1.16
평균	87.08	3.51	3.19	5.42	0.80

[부표 3] 연도별 근로시간-종사상 지위 분포

(단위: %)

연도	전일-상용	전일-임시	전일-일용	파트-상용	파트-임시/일용	합계
2008	60.79	22.45	10.26	0.40	6.11	100
2009	57.85	23.70	11.35	0.25	6.85	100
2010	56.78	25.43	10.28	0.24	7.27	100
2011	58.41	24.72	8.58	0.41	7.89	100
2012	57.68	26.00	8.34	0.36	7.63	100
2013	59.01	23.58	8.75	0.70	7.97	100
2014	60.28	23.36	7.84	0.47	8.05	100
2015	59.62	25.37	6.60	0.49	7.93	100
평균	58.79	24.36	8.94	0.42	7.49	100

[부표 4] 노동시장-가구-복지국가 단계별 근로빈곤률 추이*

(단위: %)

근로빈곤 지위	최종단계 근로빈곤					최종단계 근로비빈곤			
	LM+WS pov (A)	HH+WS pov (B)	WS pov (C)	LM+HH+WS pov (D)	근로빈곤률**	LM pov	HH pov	LM+HH pov	비위험 집단***
2008	0.22	4.64	0.74	4.08	9.68	8.70	0.74	0.68	80.21
2009	0.12	4.30	1.11	4.70	10.23	8.85	1.29	0.77	78.85
2010	0.11	4.30	0.71	4.04	9.16	10.41	0.81	0.58	79.03
2011	0.44	3.80	0.70	4.36	9.30	10.55	1.70	0.71	77.75
2012	0.14	4.42	0.57	4.44	9.57	8.35	1.81	0.63	79.64
2013	0.19	5.44	0.96	4.04	10.63	6.74	1.88	0.55	80.21
2014	0.16	5.22	0.93	3.72	10.03	8.67	1.98	0.81	78.50
2015	0.31	4.59	0.80	3.68	9.38	8.69	2.66	0.89	78.37
평균	0.21	4.60	0.82	4.12	9.75	8.85	1.64	0.70	79.05

주: * <그림 9>의 수치를 제시한 것이며 모든 수치는 개인 중단 가중치를 적용한 것임

** 근로빈곤률은 A-D 열의 합계

*** 비위험 집단(non-pov)는 최종 단계 근로비빈곤 집단이면서 노동시장-가구-복지국가 단계에서 한 번도 근로빈곤 위험에 처한 적이 없는 집단의 비율

◀ Abstract ▶

Institutional Dynamics of In-Work Poverty Determination: Distributive Process of Labor Markets, Households, and the Welfare State Using Korean Welfare Panel Study, 2008-15

Ryu, Kirak*

This paper adopts a distributive performance process model of in-work poverty based on labor markets, households, and welfare states and analyzes the 4-11 waves of the Korean Welfare Panel Study during 2008-15. Previous studies on in-work poverty have focused on the definitions and concepts of in-work poverty by analyzing employment and unemployment persistence and repetition dynamics, but rarely paid attention to institutional distributive performance. In this regard, this study preforms a stepwise analysis of labor markets, households, and welfare states as a process of income generation in labor markets, satisfaction of welfare needs and income pooling at households, and deduction of social security contribution and income tax as well as receipt of public transfer income at welfare states. Results of empirical analysis show that in-work poverty had been on increase during 2008-11, followed by a decrease between 2012-15. At labor market stages, full time status had the most prominent impact on in-work poverty process, while status by employment and contract type have generated a huge variation as well. At household stages, household work intensity and number of earners contributed to reduction of in-work poverty, but the relations did not seem to be straightforward. However, welfare state played little role in lifting employees out of in-work poverty. In terms of institutional distributive process, in-work poverty was prevalent in either household-welfare state stage or labor market-household-welfare stage. Non-vulnerable group in terms of in-risk poverty was around 80% of the sample during the period of

* Research Fellow, KRIVET (ryukirak@krivet.re.kr)

analysis, the size of which has remained constant.

Key words: In-work Poverty, Distributive Performance of Institutions, Net Poverty Exit Rates, Household Work Intensity, Non-vulnerable Group

◆ 2018. 05. 24. 접수 / 2018. 10. 05. 1차수정 / 2018. 11. 06. 게재확정